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사회관계장관회의 | |
| 회 차 | 2021 - 7 |
| 안건유형 | 심의 |

사회통합지표 개발계획(안)

2021. 5. 4.

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추진배경 | 1 |
| II . 현황 및 문제점 | 2 |
| III . 사회통합지표 개발(안) | 3 |
| 1. 기본 방향 | 3 |
| 2. 지표체계(안) 개요 | 5 |
| 3. 추진 방안 | 7 |
| 4. 영역별 지표 구성·개발(안) | 8 |
| IV . 기대 효과 | 15 |
| V . 향후 일정(안) | 16 |
| | |
| 【붙임1】 영역별 연계·활용 통계 및 행정데이터(안) | 18 |
| 【붙임2】 개발 단계별 부처간 역할분담(안) | 19 |

I. 추진 배경

□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따른 격차 심화 우려

- 경제·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화 진전 등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역동성 저하와 집단간 갈등 심화 우려
 - * '20.4분기 시장소득 기준 '소득 5분위 배율'은 7.82배로 전년 동기(6.89배)대비 증가하는 등 소득 불평등 심화(통계청, 가계동향조사)
- 사회적 격차 확대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,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경제적 비용 유발
 - * OECD 국가들에서 '85~'05년도 사이 '소득불평등도' 상승이 5년 후('90~'10년도)의 누적경제성장률을 4.7%p 감소시킨 것으로 추산(OECD, 2015)

□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동력으로서 사회통합의 중요성 증대

- 경제·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계층 이동성 촉진을 통한 사회통합은 지속발전 기반으로 작동
- EU, OECD 등에서도 사회 양극화 심화와 계층 이동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 수준 진단 및 관련 정보 제공 추진

< 주요 해외 사례 >

- 유럽연합(EU)의 사회통합 모니터링 : EU 사회발전을 위해 유럽 사회의 통합 수준을 진단하여 EU내 정책기관에 제공하고 정책 반영 추진
- OECD : 「한눈에 보는 사회」 보고서에 하위 항목으로 '사회통합' 영역 지표 발표 및 정책정보 제공, 지표값에 대한 국가간 비교 등

□ 사회통합 수준 파악을 위해 과학적·종합적 진단체계 필요

- 형평성, 공정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입체적·심층적 정보 제공

⇒ 우리사회의 사회적 통합 수준을 확인하고 증거기반의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'사회통합 지표체계' 개발 추진

II. 현황 및 문제점

□ **현행 통계 조사방식으로는 종합적·객관적 사회통합 수준 파악에 한계**

- 현행 사회통합 관련 지표에는 사회통합의 일부 단면만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역동성과 직결되는 격차·이동성 등 종단적 추이 분석에 한계

< 예시 >

- **(국가발전지표)** 성장·안정·인구·가족·고용과 노동·교육 등 16개 영역 중 하나로 사회통합 포함 (☞ 대인신뢰도, 부패인식, 사회단체 참여율 등)
- **(국민 삶의 질 지표)** 삶의 질의 차원으로 제시되는 가족·공동체, 건강 등 11개 차원 중 시민참여 포함 (☞ 투표율, 대인신뢰도 등 포함)

- 사회통계의 경우 대부분 설문조사(survey)방식을 사용하나, 조사환경 악화*, 자기기입식 형태 등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에 한계

*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 변화, 조사·응답 부담에 따른 응답률 저하 등

□ **공공정책 관련 행정데이터에 대한 소극적 공유·활용**

- 그 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유정보 공유에 소극적이어서 패널 유지·직접 조사 등에 시간·비용상의 비효율 발생
- 행정데이터 간 연계·결합을 통해 사회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*은 마련되었으나, 아직 행정빅데이터 활용은 미흡

* '데이터 3법', '데이터기반행정법' 등에서 정부·자치단체·공공기관의 과학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데이터의 공동활용 방법과 절차를 규정

□ **각종 데이터 간 연계·결합분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미비**

- 수집 중인 행정데이터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처리, 공개 기준 등이 미흡하여 공공데이터 공개를 위한 표준화 기반 마련 필요
- 공개된 데이터의 경우에도 각 데이터별로 조사 시기·범위·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데이터간 연계·결합에 애로

Ⅲ. 사회통합지표 개발(안)

1

기본 방향

□ 우리 사회의 통합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종합적 지표체계 구성

- '사회통합'을 ①사회적 포용성, ②계층간 이동가능성, 사회구성원의 소속감·신뢰 수준인 ③사회적 자본의 세가지 차원으로 접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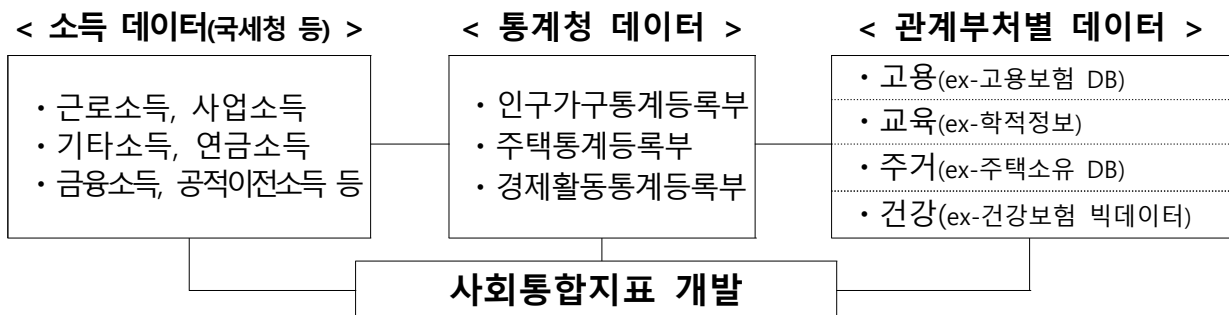
※ (OECD, 2011) 사회통합의 개념을 '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고,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신뢰를 증진하며, 구성원들에게 상향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'으로 규정

- 삶의 주요 영역(소득·자산, 고용, 교육, 주거, 건강·위험)에서 사회통합 증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사회적 논의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

□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심층적·입체적 정보 제공 및 효율화

-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데이터(국세청 소득DB, 통계청 DB 등)를 공유·연계하여 지표 생산을 위한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

< 지표 생산을 위한 부처별 데이터 연계구조 예시 >



- 데이터간 연계를 통해 입체적인 현황 진단·분석
 - 데이터 결합 시 다양한 항목별 교차분석이 가능하므로, 영역별-정책 수요 집단별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가능
 - * 예) (장애인, 청년, 여성) 고용률 / (기업규모별, 산업유형별, 성별) 임금격차

< 데이터 결합 시 분석가능 형태(예) >

집단별 × 영역별 교차분석

| 구분 | 소득·자산 | 고용 | 교육 | 주거 | 건강·위험 |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|-------|---|
| 지역별 | - | - | - | - | - | |
| 성별 | 남성 | - | - | - | - | |
| 연령별 | 20대 | 3분위 | 비정규직 | 대졸 | 임차 | - |
| 가구특성별 | 1인가구 | - | - | - | - | - |
| | - | - | - | - | - | |

* 예) 20대 청년의 소득수준, 고용형태, 학력수준, 주거형태 등 교차분석 가능

- 장기간의 개인·가구 단위 결합 정보는 그 자체가 패널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특정 정책효과나 소수집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

※ 스웨덴 노동시장 장기통합데이터(LISA) : 국민의 고용·소득, 질병, 실업·퇴직, 공적부조·연금, 학력 등의 개인정보와 가족원·직장 정보를 종합적 시계열 형태로 구축해 제공

- 기존 조사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용·시간을 절감하고 자료의 신뢰성 제고

| 조사통계 | 행정데이터 활용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별도 설문·면접조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발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 구축 데이터 활용으로 별도의 조사비용 절감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기보고식 기입 형태로 응답 오류, 과소·과대응답 등 주관성이 반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활용으로 객관성 확보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표본설계, 조사실시에 기간 소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 구축된 데이터 활용으로 적기에 지표 산출 |

□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 지표 발굴 및 생산 체계 마련

- 단계적 데이터 집적 및 사회통합 관련 신규 분야 지표 발굴·추가
 - 지표체계(안) 개발과 신규지표 산출을 위한 필요데이터 선정 이후, 연차적으로 데이터 집적 및 통합 관련 영역별 지표 추가
-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자료원(데이터)간 결합·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통식별번호 부여, 공표주기, 시계열 유지 등 공동활용 방안 논의 필요
 - * 기존 데이터는 도입 시 연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누적되어, 현재 공통결합 KEY(공통식별번호)가 없는 경우 데이터간 연계 시 제약 발생

□ 지표체계 구성(안)

사회통합 관점에서 주요 삶의 영역을 수준 및 격차, 대응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'사회적 포용·이동성' 지표 및 '사회적 자본' 지표로 구성

'사회통합' 개념 관련 해외사례

- ▶ 사회통합 요소 :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나, OECD는 사회통합의 세가지 요소로 ① 사회적 포용 ② 사회적 이동 ③ 사회 자본을 제시
- ▶ 베텔스만 재단(2013)의 사회통합 세가지 영역 : ① 사회적 관계 ② 연결성 ③ 공동선 지향
- ▶ 유럽의 사회지표의 사회통합 차원 : ① 지역간 격차 ② 동등한 기회, 젠더간/세대간/사회계층 및 집단간 불평등 ③ 사회적 배제

○ 사회적 포용·이동성

- 삶의 주요 영역에서 수준 및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와 국가의 정책적 개입정도와 효과를 보여주는 대응지표로 구성

- **(영역구분)** 삶의 영역 중 집단간 격차가 직접적으로 확인되고, 격차간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큰 정책영역을 선정하여 구분하되, 정책적 대응 상태도 함께 진단
* ①소득·자산 ②고용 ③교육 ④주거 ⑤건강·위험 영역으로 구분
- **(데이터 활용)**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집단 특성 등 행정정보·데이터들을 연계·교차하여 지표 관련 다층적·심층적 상황 파악 및 분석에 기여
※ 예) 소득계층별 고용 수준 / 주거 수준 / 건강 수준 등

- (사회적 포용)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수준과 집단간 상대적 격차를 진단하는 지표

- (사회적 이동성) 계층·집단 간의 이동성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

○ 사회적 자본

- 사회적 포용·이동성의 결과이자 원천으로, 사회에 대한 소속감·신뢰·참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

□ 사회통합 핵심지표 체계(안)

< 사회적 포용·이동성 영역 >

| 영역 | | 핵심지표(안)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|
| | | 수준 및 격차 | 대응(안전망) |
| 사회적 포용 · 이동성 | 소득·자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득 수준 및 격차 ▶ 자산 격차 ▶ 소득 이동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세전/세후 지니계수 변화율 ▶ 공적연금 수급률 |
| | 고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용 수준 및 격차 ▶ 임금 수준 및 격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용보험 가입자 수 ▶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현황 |
| | 교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교육 수준 및 격차 ▶ 대학교육 접근성 ▶ 세대간 이동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교육비 지원(교육급여, 국가장학금 지원액) ▶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|
| | 주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거수준 및 격차 ▶ 주거자산 격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임대주택 재고 ▶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비율 |
| | 건강·위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건강 수준 및 격차 ▶ 건강 위험 격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보장률 ▶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|

< 사회적 자본 영역 >

| 영역 | | 지표(안)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|
| 사회적 자본 | 네트워크 | ▶ 지역사회 소속감, 이웃 유대 | |
| | 신뢰 | ▶ 타인 신뢰, 기관 신뢰 | |
| | 참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회단체 참여(정당, 시민단체) ▶ 노동조합 조직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민 참여(기부 및 자원봉사) ▶ 투표율 ▶ 시민단체(비영리단체) 등록건수 |
| | 호혜성 및 공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정성 인식 ▶ 자원봉사 참여현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다문화 수용성 ▶ 사회 갈등 인식 ▶ 헌혈 횟수 ▶ 기부금 현황 |

① 유형별 지표 개발 추진

○ 既 공표 통계 보완

- 전국기준 단일수치 등 전반적 현황으로만 공표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, 다양한 세부 기준별로 현황 진단이 가능한 지표 개발

* 예) (기존) 소득5분위배율(단일수치) → (개선) △△ 지역, 40대 등 특정집단별 심층 분석

○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지표 개발

- 핵심지표별로 다양한 데이터(소득수준, 지역 등)와 연계하여 심층적·다각적 분석이 가능한 세부지표 개발

* 예) 임금수준 → (세부) 성별×지역별 / 성별×업종별 / 업종별×기업 규모별 등

○ 행정데이터 연계·교차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 보완

- 설문·수기조사를 활용한 현황조사 방식에서 행정데이터간 연계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 산출

* 예) 이주배경 학생 현황 : (기존) 수기조사로 현황 파악→ (개선) 행정데이터간 연계 (국세청 소득 표본정보, 통계청 인구·가구정보, NEIS 학적정보 등 연계·분석)

② 중장기적 연계데이터 확대를 통한 지표개발보완

○ 향후 부처별 데이터 연계를 통한 기초 DB 구축과 지속적인 데이터 연계·결합*을 위해 통계청의 인력 및 예산 지원 추진

* 통계청이 다양한 데이터(통계청 DB + 소득+ 교육+ 고용+ 주거 등) 연계·결합 담당

○ 중장기적으로 소득 및 인구·가구 연계데이터 축적으로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대한 종합적·시계열적 정보 제공 가능 기반 구축

○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관간 협의를 통한 신규지표 추가개발 병행 및 기 개발된 지표의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 지표 보완

(1) 소득·자산 영역

□ 선정 이유

- '소득·자산'은 경제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가져오는 기본적인 변인

□ '소득·자산' 영역 지표(안)

- 집단별(지역/연령대별/성별 등) 소득·자산 격차 파악 및 소득 이동성 관련 지표와 공적연금 등 사후적 재분배와 관련된 대응 지표로 구성

< 소득·자산영역 지표(안) >

| | | |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준 및 격차 | ▶ 상대적 빈곤율 ▶ 중간소득계층 비율 ▶ 소득5분위배율 ▶ 소득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| 대응 (안전망) | ▶ 세전/세후 지니계수 변화율 ▶ 공적연금 수급률 |
| 이동성 | ▶ 개인 소득 이동성 ▶ 세대간 소득 이동성 ▶ 저소득가구 빈곤탈출률 | | |

* 세대간 소득 이동성·저소득가구 빈곤 탈출률 지표의 경우, 충분한 소득자료 확보와 연계하여 산출 검토

□ 지표 생산·활용 방안

- 소득 표본정보*(국세청) + 인구·가구 정보(통계청) 등 데이터 결합으로, 부의 집중도 등을 파악하여 소득 불평등 현황 파악

* 지표개발 과정에서 표본오차 감축 등을 위해 필요 시 표본 제공규모 확대 추진

⇒ 결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개인 생애 단계에서의 소득분위 변동에 대한 종단분석 추진으로 이동성 파악

< 세부지표 개발(예) >

< 데이터 정보 >

- 소득 정보
 - *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연금소득, 금융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
- 인구 DB

< 지표(안) >

- 개인 소득이동성
 - 예) 지방과 수도권 청년층의 소득격차와 소득 이동 추이 비교

[2] 고용 영역

□ 선정 이유

-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적절한 소득 확보는 개인의 생활 유지와 경제적 독립을 위한 기본 전제

□ '고용' 영역 지표(안)

- 취약집단 고용률(청년/여성/장애인), 집단특성별(성별/산업유형별/기업 규모별) 임금 격차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고용 상태 확보를 위한 대응 지표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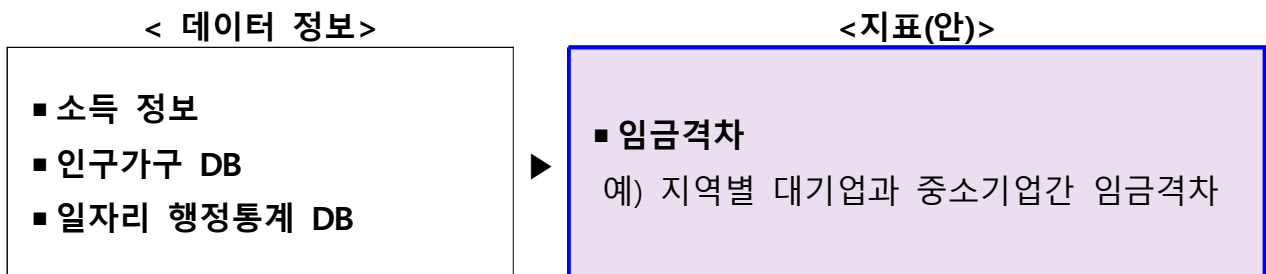
< 고용영역 지표(안) >

| | |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|--|
| 수준 및 격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약집단별 고용률 ▶ 비정규직 비율 ▶ 저임금근로자 비율 ▶ 임금격차 | 대응(안전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용보험 가입자 수 ▶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현황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|--|

□ 지표 생산·활용 방안

- 일자리 행정통계 DB(통계청), 고용보험 DB(고용부),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정보(고용부) 등 활용, 취약계층 고용 현황 및 임금수준 파악
- ⇒ 기업규모, 산업유형, 성별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고용·임금 수준 분석을 통해 취약 집단에 대한 고용안전망 추이 확인

< 세부지표 개발(예) >



[3] 교육 영역

□ 선정 이유

- 교육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의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주요 통로로 인식

□ '교육' 영역 지표(안)

- 교육의 기회나 과정, 결과·성과에 있어서 형평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*으로 교육영역 지표를 도출

* ▲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받고 있는지(최소기준) ▲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정도(배경에 따른 격차) ▲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도(취약계층 교육지원)

< 교육영역 지표(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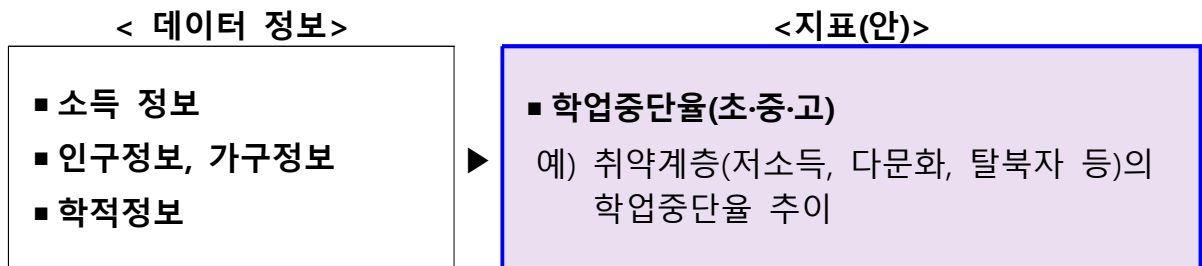
| | |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|
| 수준 및 격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학업중단율 ▶ 사교육 참여율 ▶ 학업성취도 | 대응(안전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▶ 교육비 지원(교육급여, 국가장학금 지원액)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|

□ 지표 생산·활용 방안

- 소득 표본정보(국세청), 인구·가구정보(통계청)와 교육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교육 현황 파악

⇒ 소득 - 교육 - 고용 등 통합적 관점에서 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와 사회이동성 추이 확인

< 세부지표 개발(예) >



※ **【참고】 교육 영역 지표 개발(안)**

- (지표 개발) 교육데이터와 타 기관 데이터(국세청 소득정보, 통계청 인구·가구정보 등) 연계·활용을 통한 지표 생산
- (초·중등) 취약집단, 지역(대·중소도시, 읍면 등) 등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지, 학업 중단 여부 등의 교육 결과의 차이 파악

< 생산 검토 지표(안) >

| 지표명 | 지표 설명 | 생산 방안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취학률(초·중·고) |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전체 취학적령 인구 대비 취학 학생 비율 | 인구·가구정보(통계청) - 학적정보(나이스) 연계 |
| 학업중단율(초·중·고) | 가구소득(ex. 5구간으로 구분)별, 지역별(ex. 대/중소도시/읍면), 다문화 학생 등 관련 학업중단율 도출 | 소득정보(국세청) - 인구·가구정보(통계청)- 학적정보(나이스) 연계 |
| 이주배경(다문화탈북) 학생 현황 | 다문화 및 탈북 학생 규모 파악 | 인구·가구정보(통계청) - 학적정보(나이스) 등 연계 |

- (고등교육) 저소득층·취약집단의 대학교육 접근성 및 노동시장 이행(취업률 등) 추이 등 파악

< 생산 검토 지표(안) >

| 지표명 | 지표 설명 | 생산 방안 |
|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대학 유형별 진학률 | 가구소득별, 지역별, 다문화 학생의 대학 유형*에 따른 진학률 * 국공립/사립, 4년제/전문대 등 | 소득정보(국세청) - 인구·가구정보(통계청)-대학입학정보(고등교육기관 기본 통계조사) 연계('23~) |
| 대학 입학생 중 저소득층 비중 | 대학 유형별, 소재지별 신입생 중 저소득층(ex. 소득 3구간 이하) 비중 | 한국장학재단 행정데이터(국가장학금 수혜자 정보) 활용 |
|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| 대학 유형별, 소재지별 신입생 중 기회균형 선발 학생 비율 |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|
| 취업률 | 가구소득(ex. 5구간)별 평균 취업률 및 첫 일자리 임금 수준 비교 | 취업 관련 통계자료,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 등 |

- (데이터 확보) 데이터 간 결합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한 지표는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데이터 확보 추진
- 소득·가구정보(국세청·통계청)와 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연계 등

[4] 주거 영역

□ 선정 이유

- 주거 안정은 독립적 경제활동과 가족 구성을 위한 핵심 기반

□ '주거' 영역 지표(안)

- 주거 빈곤층 규모, 주거자산 격차, 주거 안정성 확보 기간,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공급 등 대응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구성

* 지역별, 소득수준별, 취약계층별 등 구분

< 주거영역 지표(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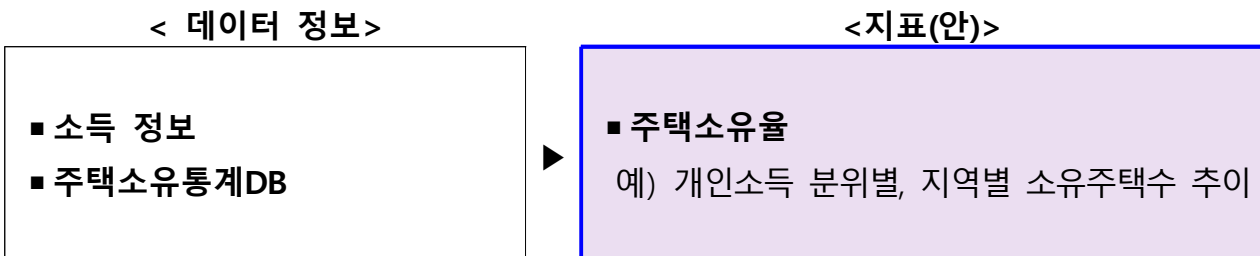
| | | | |
|---------|--|---------|---|
| 수준 및 격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▶ 주택 소유율 ▶ 다주택자 비율 ▶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년수 ▶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| 대응(안전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임대주택 재고 ▶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비율 |
|---------|--|---------|---|

□ 지표 생산·활용 방안

- 소득 정보(국세청), 주택소유통계 DB(통계청), 임대주택 통계 등 데이터 활용으로 지역별, 소득수준별 주거 격차를 진단

⇒ 주거환경, 주거 보유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요 자산 변화 확인 가능

< 세부지표 개발(예) >



[5] 건강·위험 영역

□ 선정 이유

-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기초적 여건으로 질병, 위험을 최소화하고,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원배분·관리 차원에서 중요

□ '건강' 영역 지표(안)

- 외부 요인(경제적·지역적 여건)으로 인한 건강·위험 격차, 기본적인 건강 보장수준 확보를 위한 정책대응 파악 지표로 구성

< 건강영역 지표(안) >

| | | | |
|---------|--|---------|--|
| 수준 및 격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미충족 의료율 ▶ 산재 발생률 ▶ 유병률 | 대응(안전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보장률 ▶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|
|---------|--|---------|--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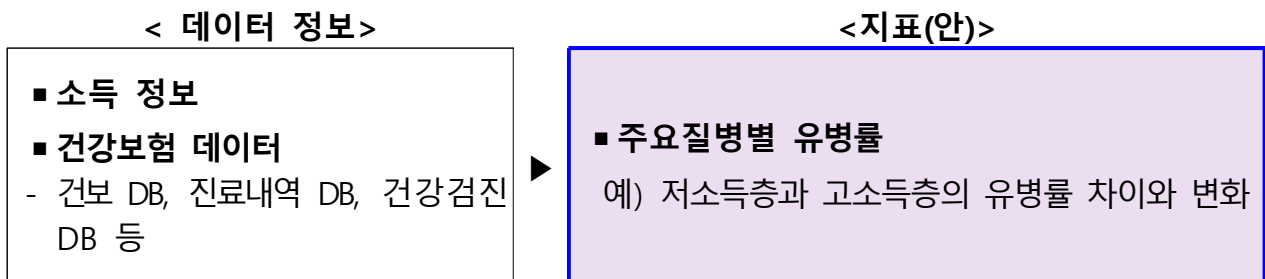
□ 지표 생산·활용 방안

- 소득정보(국세청), 건강보험 빅데이터*(복지부) 등을 연계하여 소득·지역 여건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격차 등 확인

* 자격 및 보험료 DB, 진료내역 DB, 건강검진 DB 등

⇒ 소득수준, 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질병상태 변화 등을 파악하여 국민의 건강·위험 상태를 다각적으로 확인

< 세부지표 개발(예) >



[6] 사회적 자본 영역

□ 선정 이유

- 사회에 대한 신뢰·참여 수준 등을 보여주는 ‘사회적 자본’은 그 자체로 사회의 통합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동력

□ ‘사회적 자본’ 영역 지표(안)

- 소속감·신뢰 수준, 사회참여, 공정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 구성

< 사회적자본 영역 지표(안) >

| 구분 / 자료원 | 실태조사 | 행정데이터(예)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네트워크 | ▶지역사회 소속감, 이웃 유대 | - |
| 신뢰 | ▶타인 신뢰 ▶기관 신뢰 | - |
| 참여 | ▶사회단체 참여(정당, 시민단체) ▶시민 참여(기부 및 자원봉사) | ▶노동조합 조직률 ▶투표율 ▶시민단체(비영리단체) 등록건수 |
| 호혜성 및 공정성 | ▶공정성 인식 ▶다문화 수용성 ▶사회 갈등 인식 | ▶자원봉사 참여현황 ▶헌혈 횟수 ▶기부금 현황 |

□ 지표 생산·활용 방안

- 사회구성원의 소속감, 신뢰·사회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주관적 인식 위주 지표로, 기존 실태조사* 결과 값 활용

*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수행 중인 ‘사회통합 실태조사’ 결과 활용

- 또한, 데이터 기반 지표산출을 위해 행정통계·자료(기부금 현황, 자원봉사 참여현황 등)를 함께 활용하여 ‘사회적 자본’ 수준 측정 추진

IV. 기대 효과

□ 종합적인 사회통합수준 분석 가능

- 삶의 영역별 사회적 배경에 따른 격차 및 불평등 현황, 계층이동 추이 등 사회통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본틀 마련
- 종합적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추이 등 정보 제공*

* (예) 소득계층 하락 가구 특징 및 취약 가구 분석

□ 증거기반 사회정책 추진 기반 마련

- 부처간 행정데이터 연계·통합·활용을 통한 지표체계 개발은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로서 분석과 검증이 가능한 다각적·심층적 정보 제공 가능
 - 추가 정책수요 발생 시, 해당 집단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추가 연계·확장으로 대상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가능
- 조사기입 방식이 아닌 행정데이터 활용방식은 응답오차에 의한 과대·과소 계상 위험을 줄이고 정확성이 높은 정책자료 수집 가능

□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효율화

- 공공데이터 활용시 정책성과 확인이 가능한 통계 생산 시점과 정책 집행 시점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지표 산출 시의성 제고
- 사회분야 행정데이터 공유체계 마련시 직접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·활용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절감과 시간 단축 가능

V. 향후 일정(안)

□ (1단계) 행정데이터 공개·연계 기반 마련(~'21.)

- 사회통합지표 산출에 필요한 관계부처 데이터 제공 협의를 위한 세부지표(안) 마련(~9월)
- 세부지표별 필요데이터 목록 구축, 데이터 입수 관련 부처협의(~12월)

□ (2단계) 지표 개발 및 시범 분석('22~'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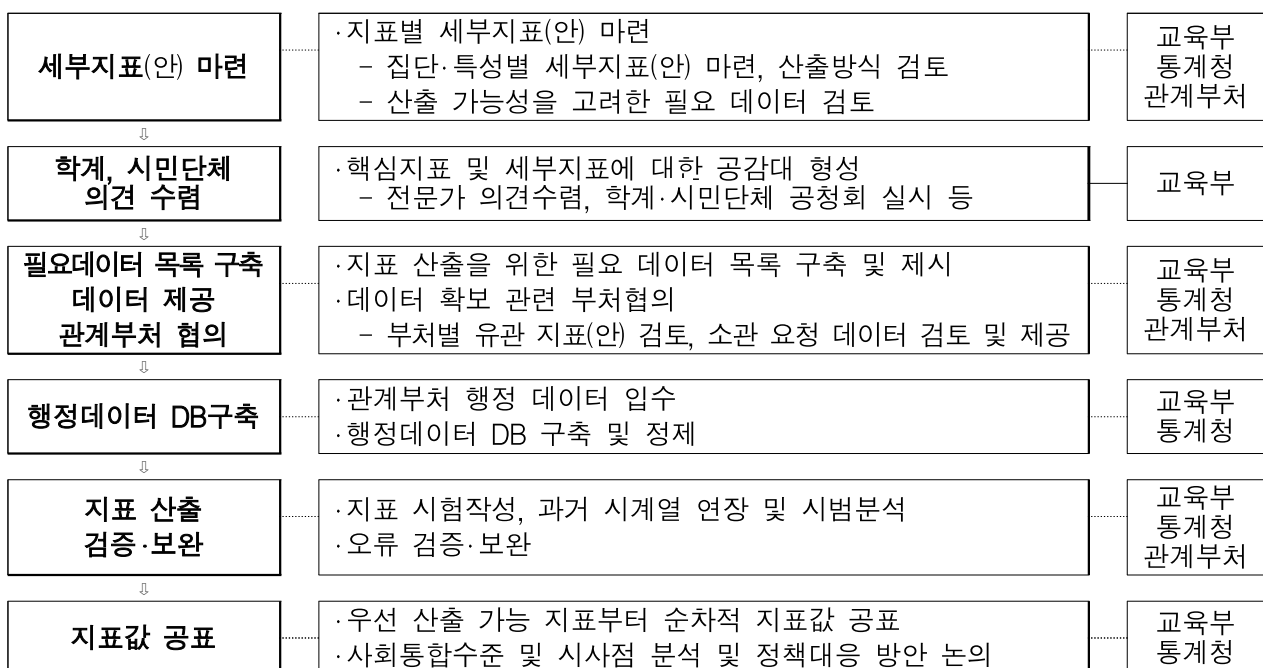
- 지표 시범산출·분석 및 영역별 행정데이터 DB구축·정제
 - * 관계부처 실무TF에서 결정한 우선 산출 가능 지표부터 개발 추진
- 지표값 오류 검증·보완

- ※ 유사 사회통계·지표 개발사례(개발 단계부터 결과 공표까지 다년 소요)
- ▶ 국민 삶의 질 지표 : 체계 개발('11), 미생산 지표 보완('12~'13),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('14~)
 - ▶ 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 : 체계 구축('18), 산출방법론 연구('19), 순차적 평가 및 보완('20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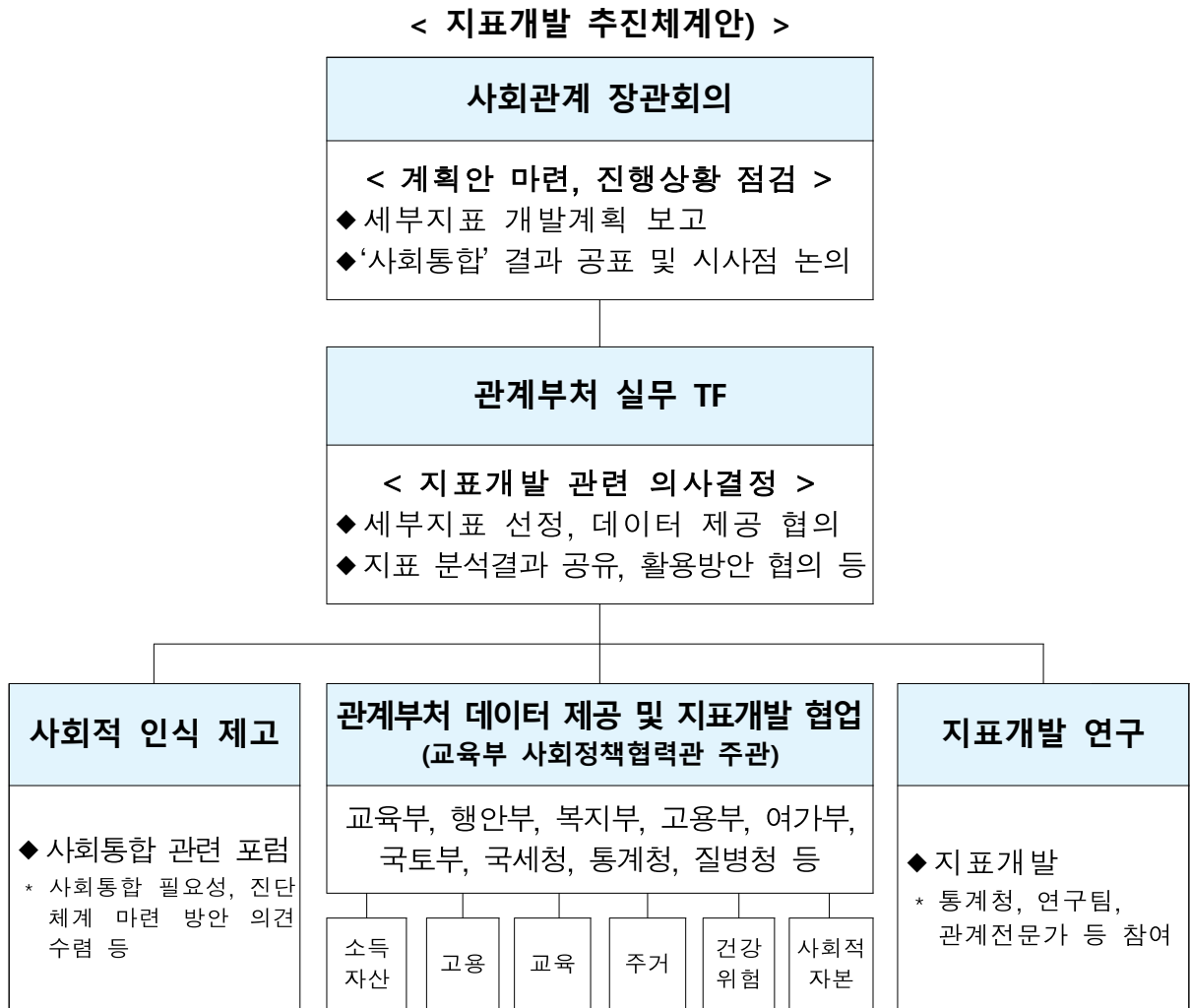
□ (3단계) 개발된 지표부터 순차적 공표('23.말~)

- 사회통합수준 결과에 따른 시사점 분석
- 지속적 지표 갱신 및 추가개발,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표 개선·보완 등

※ 추진 흐름도(안)



[참고] : 유관부처간 협업체계(안)



※ 관계부처 실무TF 구성·운영

- (구성 및 운영) 교육부(간사), 통계청 및 관계부처·기관* 통계 담당 부서 등이 해당 영역 및 과제별 참여방식으로 운영
 - *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국토교통부, 국세청, 질병관리청, 한국행정연구원 등
- (역할) 데이터 제공 및 지표개발 관련 전반사항 의사결정
 - 세부지표 선정, 공유데이터 목록 확정, 데이터 제공 범위·시기 등 결정
 - 데이터 연계·결합 지표 시범 분석결과 공유 및 검증
 - 지표 활용방안(기존 지표 대체 등) 협의 등

| | 영역 | 통계·행정데이터명 |
|---|-------|--|
| <p>국세청 소득 정보 · 통계청 인구가구DB</p> | 소득·자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계금융복지조사 ▪ 고령자통계 ▪ 소득 DB(소득 표본데이터 활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연금소득, 금융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 |
| | 고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용행정통계 ▪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▪ 고용보험 DB ▪ 경제활동인구조사 ▪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▪ 한국노동패널, 한국복지패널, 조세재정패널 ▪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▪ 일자리사업 참여자 통계 |
| | 교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 ▪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 ▪ NEIS 학적정보 ▪ 국가장학금 정보 ▪ 대학정보공시 정보 ▪ 취업관련 정보 ▪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(GOMS) ▪ 학업성취도 정보 |
| | 주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거실태조사 ▪ 주택소유통계 ▪ 임대주택통계 ▪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현황 |
| | 건강·위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사회건강조사 ▪ 사회조사 ▪ 국민건강영양조사 ▪ 건강검진통계연보 ▪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▪ 건강보험 정보(자격 및 보험료 DB, 진료내역 DB, 건강검진 DB 등) ▪ 산업재해현황 통계 데이터 ▪ 산재보험 데이터 |

붙임2

개발 단계별 부처 간 역할 분담(안)

| 구분 | 교육부 | 통계청 | 관계부처 |
|----------|--|---|--|
| 지표 체계 마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표체계 개발 ▶ 핵심지표 및 세부지표 선정 총괄 ▶ 지표개발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표체계, 핵심지표 선정 등에 관한 자문 ▶ 기관별로 마련한 세부지표 작성안에 관한 검토 ▶ 소관 지표별 세부지표 검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관 지표별 세부지표 검토 |
| 자료 입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표생산을 위한 자료입수 협의 총괄 ▶ 필요 데이터 목록 제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필요 데이터 목록 검토 ▶ 행정데이터 입수 및 기초 DB 구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필요 데이터 검토 및 목록 제시 ▶ 지표 개발을 위한 통계 및 행정데이터 제공 협력 |
| 지표 생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표생산 관련 부처협의 총괄 ▶ 지표값 산출 총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관지표 산출 ▶ 각 부처 데이터간 연계DB 구축 및 지속적 결합·연계 지원 ▶ 연계DB 활용 세부지표의 산출 타당성 검증, 지표산출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범 산출 지표값 검토 ▶ 소관지표 산출 및 승인 통계화 추진 * 관계부처 실무 TF에서 논의한 신규지표 활용, 지표 대체·보완 등 반영 |
| 공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사회통합지표' 공표 및 공표결과에 따른 시사점 분석 및 정책대응 총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사회통합지표' 작성·공표 * 초기 2~3차례 통계청, 교육부 합동 발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책 추진 시 분석결과 활용 |
| 지표 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표 개선 및 보완 관련 부처협의 총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표 개선 및 보완 관련 의견 제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표 개선 및 보완 관련 의견 제시 |

□ 기타 관계부처 : 국세청

* 소득 정보를 활용한 지표 전반 개발과 관련 소득 표본데이터 제공 협력